

유럽위원회, EU 특허규칙안 승인

유럽위원회가 EU 전역에서 유효한 통일 특허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EU 특허규칙안을 승인했다. 규칙안은 늦어도 2001년말까지는 실시될 전망으로 특허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2000년 7월 5일, EU 규칙안을 승인하고 현행 유럽 특허 규약과 더불어 실시하기로 했다. 규칙안은 법적인 효력이 유럽 전지역에 유효해 유럽에 통일된 절차로 유럽 전역의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행 EU의 특허 제도는 특허 인·허가가 각국에서 진행되거나 유럽특허조약에 근거해 출원하고 특허를 부여받는다. 유럽특허조약은 기본적으로 유럽 다자간 협정으로 단일 출원과 수속으로 복수 지정국들의 특허를 얻게 된다. 그러나 유럽특허조

약의 범위를 넘는 소송을 조정할 때는 각국 법정의 판결에 따라 진행돼, 각국마다 다른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유럽특허승인을 얻었다할지라도 유럽특허 지정국마다 각국이 지정한 수속을 따로 밟아야 하기 때문에 각국 언어로 번역해야 하고 이에따라 특허비용이 미국, 일본보다도 3배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 또한 EU 국가마다 다르고 상반되기까지한 유럽특허제도로 특허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EU 특허 규칙안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유럽 사법재판소내에서 취급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가맹국간 회담을 갖고 있다.

미국, 정부입찰 통합공고 사이트 개설

미 연방정부가 정부조달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정부기관의 건당 2만5천달러 이상 입찰공고를 한 군데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입찰 온라인 공고 시스템인 FedBizOpps사이트(www.fedbizopps.gov)를 개설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FedBizOpps사이트는 미국 전 연방정부기관 입찰전에 대한 일종의 전자게시시스템(EPS: Eletronic Posting System)인 것이다.

미국은 이번 입찰 통합시스템 구축이전에는 폐쇄적인 EDI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FACNET(Federal Acquisition Computer Network)을 통해 미 연방정부기관의 조달을 통합한다는 계획을 세워 진행해 왔다.

개정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건당 2만5천달러 이상의 모든 정부입찰 건에 대해 미 상무부가 발행하는 CBD(Commerce Business Daily)에 입찰내용을 공고토록 되어 있는 연방정

부기관의 의무조항이 없어지게 되며 2001년 10월 1일까지 모든 미 연방정부기관의 조달시스템을 FedBizOpps로 이전토록 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기관은 입찰사전공고와 입찰 결과를 FedBizOpps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내용의 변경사항과 함께 정부조달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토록 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최초 정부입찰전에 대해 주 계약업체로 선정된 업체들로 하여금 동 입찰과 관련된 하청계약 참여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하청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도 이 사이트에 게시토록 허용할 예정으로 있어 미 조달시장에 하청협력업체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내업체들에게는 좋은 참여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전기기사업 중국시장 공략 확대

일본의 중전기 메이커들이 중국시장을 놓고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들 중전기 각사는 최근 전력수요가 늘고 있는 중국시장 현지에 합작사를 설립, 자국내 수요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중국시장 개척으로 만회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중전기 시장은 이미 미국 메이커들이 석권하고 있어 이들과의 중원제패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東芝는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 2001년 10월부터 송변전기기의 생산·판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전력수요가 신장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중전기기의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에서 현지생산으로 전환하여 중국에서의 중전사업을 확대한다.

이같은 중국현지 생산거점 확보는 일본국내 중전시장이 각 전력사들의 설비투자 억제로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전 각사는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중국에 잇따라 생산거점을 설치하고 있는 등 국내

에서 해외시장으로 투자선을 전환하는 움직임이 확인해 지고 있다.

東芝는 중국에 중전 메이커인 河南高壓開閉公司(河南省)를 설립한다.

내년 10월에 공장을 완성시켜 발전소 및 변전소에서 사용하는 가스절연개폐기를 생산, 중국 전력사에 납품하는 한편 향후에는 일본, 미국에도 수출한다.

발전수요의 신장에 따라 중국에서는 송변전 설비의 신설이 잇따르고 있으며, 東芝는 소용량부터 대용량까지 폭넓게 생산해 수요에 대응하며 2003년도 매출은 40억엔을 계획하고 있다.

東芝는 이미 1995년에 변압기에 이어 올 5월에는 차단기 합작회사를 설립했으며 중전분야에서는 3社째가 된다.

중전 메이커 중에서 富士電機가 올 봄에 山東省에 개폐장치 합작공장을 가동시키는 한편 高岳製作所도 遼寧省에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또 三菱電機도 중국에서의 현지생산 외에 수출을 강화해 중전부문의 해외수주 비율을 20%에서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의 중전시장은 美 제너럴 일렉트릭을 비롯한 구미세가 우세하다.

일본의 중전 메이커는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여 중국 비즈니스의 확대에 국내의 매출감을 보완할 방침이다.

中, UPS 수요 확대 전망

중국은 50년대부터 연구소와 대형 공업기업을 중심으로 UPS(Uninterrupted Power Supply : 보조전원)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80년대초까지 일반 소비자들은 UPS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80년대 중기 대만의 UPS 제조업체 Santak사(www.stk.com.cn)가 중국시장 진출후 UPS가 PC의 주요 외부설비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전기 제품 판매상들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95년에 미국 APC사(American Power Conversion Corp., www.apcc.com)가 중국시장에 진출해 네트워크 UPS의 개념을 부여하면서 UPS 시장이 빠른 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Y2K 문제와 정부 사이트 개설 및 인터넷의 급속 발전에 따라 UPS 시장에도 네트워크 붐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해 성숙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국의 UPS 시장은 매출수량 73만대, 매출액 16억8천만위안(약 2억달러)으로 각기 전년 대비 12.4%와 9.6% 성장률을 기록했다.

UPS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했으며 IT산업과의 연관성이 밀접해지면서 금년 매출액은 작년 대비 12% 증가한 18억8천만위안(약 2억3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CCID(信息産業部計算機與微電子發展研究中心, www.ccidnet.com) 관련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UPS 시장에서 금융과 통신부문이 34.1%와 29.5%로 대부분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체부문이 5.8%, 정부부문이 6.3%, 가정이 4.3%를 차지했다.

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업체사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통신관련 설비투자가 크게 늘고 있으며 UPS에 대한 수요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수량 증가와 가정용 PC 보급률 제고로 중소기업과 가정이 UPS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금융 등의 부문이 UPS 주요 소비자인 관제로 용량 5~30kVA 제품이 중국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온라인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중국시장에서는 50여개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소용량 제품에서는 대만 Santak사가 많이 알려졌고 중대용량 제품에서는 미국 APC사가 많이 알려졌다. 특히 미국 APC사는 건국 50주년 기념행사 전원설비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등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가정을 중심으로 소용량 UP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다수 UPS 제조업체들이 소용량 UPS를 출시하고 있으며 시장선점을 위한

● 수입현황

(단위 : 대, US\$만)

국 별	1998		1999		2000. 1~3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프 랑 스	1,108	288	3,905	1,264	555	324
미 국	3,067	558	4,723	1,046	539	214
아일랜드	6,183	346	9,824	653	871	189
한 국	710	53	143	44	27	3
총 계	212,294	2,424	90,050	5,197	15,163	1,222

[자료 : 중국 해관통계]

경쟁이 치열하다.

IT산업의 급속 발전과 더불어 UPS와 IT산업 결합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UPS 판매도 점차 IT제품 판매상을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UPS의 주요 사용자인 통신업체들의 경우 입찰 방식으로 UPS 제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공급업체의 제품수준과 서비스 수준 등을 주요 참고변수로 삼고 있다.

통신, 금융 등의 부문을 비롯해 UPS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자체기술이 떨

어지는 등 원인으로 상당부분을 수입품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난해 UPS 수입량은 9만50대, 수입액은 5,170만달러에 달해 '98년대비 수입량은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대폭 증가했다. 금년 1/4분기 수입량과 수입액은 각기 전년동기대비 18.8%와 19.1% 증가했다.

UPS는 일반제품으로 분류되어 별다른 수입규제가 없으며 세율은 38.06%(관세 18%, 증치세 17%)가 적용된다.

인도, 신규 발전소 건설 추진

인도 전력부는 정부출자에 의존하지 않는 민간 부문에서 약 19기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2000년 4월~2001년 3월 사이에 완료될 것이라고 공식 성명서에서 밝혔다. 그는 또한 인도가 오는 2002년 3월까지 목표치인 17,588MW의 발전설비 건설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전력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그 동안 행정 절차의 지연 및 복잡한 인허가 문제 등으로 위축되었던 민간 부문의 발전설비 건설 프로젝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인도 전력부가 현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투자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력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주(州)에 대해서만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이를 위해서는 각 주에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는 '주(州) 전기 위원회(SEBs)'가 현재 일부 주에서 50%까지 도난사고가 발생하는 전기의 도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증가일로에 있는 인도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00,000MW의 추가 발전설비가 필요하며 대규모 민간부문으로부터의 투자가 요망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인도는 화력 및 원자력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기술수준을 구축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원전 및 고속증식로의 개발에 자국내 기술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예로서 인도의 BHEL(Bharat Heavy Electric Ltd.)은 현재 Rajasthan에 건설중인 Suratgarh 발전소의 제 2단계 프로젝트에서 1억8천만루피(미화 3,970

만달러) 상당의 계장제어(R&C) 시스템 공급 주문을 따냈다고 PTI(Press Trust of India)지가 보도하였다. BHEL은 지멘스와 Tata Honeywell 등의 회사들과 입찰에서 공급주문을 따낸 것이라고 BHEL은 밝혔다. BHEL은 Bangalore 소재 전기-전자부문에서 최신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기초한 I&C 계통을 제작할 예정이다.

인도는 원자력 설비용량의 확충에도 적극적이다. 인도에는 현재 10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설비용량은 1,840MW이다. 10기원전의 이용률은 75% 정도이고, 원자력의 점유율은 1999년 현재 전체 발전량 93,650MW에서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4기의 원자로가 현재 건설 중인데 이들은 올 하반기에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중동국가 과다한 인증수수료” 정부 대책마련 시급

중동국가들이 한국주재 자국영사에서 인증한 인보이스(Invoice, 상업송장)와 C/O(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 대중동 수출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른 지역과 달리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은 주한 영사관을 통해 인보이스, C/O 등 무역서류 인증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인증수수료를 부과, 수출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적게는 건당 1만2천원에서 많게는 14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일부 영사관은 오전 9~11시 사이에만 인증접수

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처리기간도 평균 3일 정도가 소요돼 지방업체들의 경우 이에 따른 경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플랜트 등 대형프로젝트를 제외한 물품수출의 경우 수출서류 인증에 필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 수출채산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과도한 인증 수수료 부과와 관련 산자부와 외교부 등을 통해 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있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심지어 2천만원어치 수출을 하 고도 40만~50만원의 인증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

우도 있다고 한다.

현대중합상사의 한 관계자는 “터키와 이집트가 각각 건당 2만원, 7만5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란의 경우 2만달러 이상을 수출할 경우 11만5천원 정도를 부과해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중동지역 수출이 활발한 동성교역과 태왕물산 등 직물수출업체들도 사우디아라비아(건당 1만2천원)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이 건당 수십만원의 인증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KOTRA 아주부는 “올 2월 UAE측이 더 이상 인보이스와 C/O 첨부을 의무화하지 않는 등 수입서류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UAE 주한영사관측이 그런일 없다고 발뺌을 했다”며 “영사확인 제도로 인해 제품단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는 '98년 9월 1일 통관분부

터 수입 물품 통관시 한국주재 UAE 영사가 확인한 인보이스 및 C/O 첨부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사확인 수수료는 C/O는 14달러가 부과되고 인보이스는 2만7천달러 이하 수출시 28달러, 27만달러 이상은 547달러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UAE는 C/O가 없는 경우 현지 세관은 세관 통과시 137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란의 경우 불법 무역거래 행위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한국주재 대사관을 통해 수출규모에 따라 인보이스와 C/O를 인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업체들은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과 함께 부당 지연사례가 발생, 선적지연 등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도 건당 7만5천원에 인보이스와 C/O를 인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집트는 C/O와 관련 '98년 11월 이후 11번에 걸친 행정명령이 시달되는 등 법령 시행상의 일관성 부족으로 양국 무역에 혼란을 주고 있다.

UAE, 인도 발전설비 건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한 석유회사는 인도의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2,000MW의 발전설비를 건설하는데 17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인도 회사와 합의 서명하였다. UAE의 Al Manhal 석유회사와 인도의 협력 벤처회사인 Vavasi 석유 가스회사는 인도 북부의 1억4천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Uttar Pradesh 주에 이와 같이 투자하기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Uttar Pradesh주의 낙후된 동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UAE의 이 석유회사는 인도 동부 해안의 Orissa 주로부터 동부 지역의 Uttar Pradesh까지 총 1,000km의 장거리 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 지역의 심각한 전력 에너지난을 해소시키기 위해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도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Al Manhal 석유회사는 인도의 Aditya Birla 그룹과 발전소 건설부문에서 협력하기 위해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는 호주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이 가스를 Orissa주의 Gopalpur에서 하역하고, 가스형태로 변환한 후 가



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Uttar Pradesh주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 액화천연가스의 공급은 그동안 수입 나프타에 의존해오던 이 지역의 비료 및 섬유 공장들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47년 이래로 에너지 정책 관리들은 당시 전력 공급의 약 25%를 차지했던 수력과 약 75%를 차지했던 화력 발전을 선호해 왔다. 인도의 1999년도 말 현재 발전 설비

용량은 약 93,000MW이다. 인도에서는 수력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력이 복귀하고 화력 발전소의 연료 매장량이 감소되어 감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을 통한 화력발전소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과학자들은 발전에서 연료 의존비율이 낮은 원전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데 원자력은 현재 인도 전력 생산에서 약 2.5%를 점유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수입관세 산정방법

1. 제품 가격 및 운임

가. 제품 가격(파키스탄 루피화기준) : 100.00
로 가정

나. 운임 : 제품 가격의 10% 가정

다. C&F 가격 : 가+나=110.00

2. 보험료 및 CIF 가격

가. 보험료 : C&F 가격의 1%로 가정

나. CIF 가격 : C&F 가격+보험료=111.10

3. 입국세(landing charge) : CIF 가격의 1%

- 입국세 부과 후의 가격 총액 : 112.21

4. 관세 : 입국세 부과 후 가격의 25%

- 관세 부과 후의 가격 총액 : 140.26

5. 판매세 : 0%

- 판매세 부과 후의 가격 총액 : 140.26

6. 사전소득세(Advance Income Tax) : 판매세

부과 후 가격의 5%

- 사전소득세 부과 후의 가격 총액 : 147.27

7. 기타(통관 수수료, forwarding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 : C&F 가격의 85%

- 기타 조세 부과 후의 가격 총액 : 156.07

8. 최종 가격 : 156.07

■ 파키스탄 관세관련 정부기관

○ Central Board of Revenue(CBR : 국세청)
Government of Pakistan

CBR House, Opposite Parliament House
Islamabad, Pakistan

Tel : 92-51-9201938

Fax : 92-51-9205308

○ Pakistan Customs House(세관)

Opposite Qamar House

M.A. Jinnah Road

Karachi, Pakistan

Tel : 92-21-111-700-600

Fax : 92-21-9214170

● 우리나라의 對파키스탄 품목별 수출 실적 (MTI 1단위)

(단위 : US\$ 천, %)

품 목 명	1999		2000(1~7월)	
	금 액	증 가 율	금 액	증 가 율
화학공업제품	126,193	-8.5	97,066	65.2
기계류 및 운반용	55,972	32.5	46,288	66.8
섬유류	58,098	9.7	33,066	-0.4
전자 및 전기	41,264	12.3	27,719	7.9
철강·금속제품	26,562	-30.6	12,811	-26.8
플라스틱, 고무 및	15,366	-3.9	9,247	-1.9
비금속광물제품	7,164	-45.3	6,174	37.5
잡제품	2,570	-10.8	1,443	-6.2
일차산품	3,364	16.9	799	-71.1
생활용품	1,493	16.5	556	-31.6
합 계	338,047	-1.8	235,167	29.2

[정보원 : KOTIS]

국제유가급등! 에너지는 달려입니다.